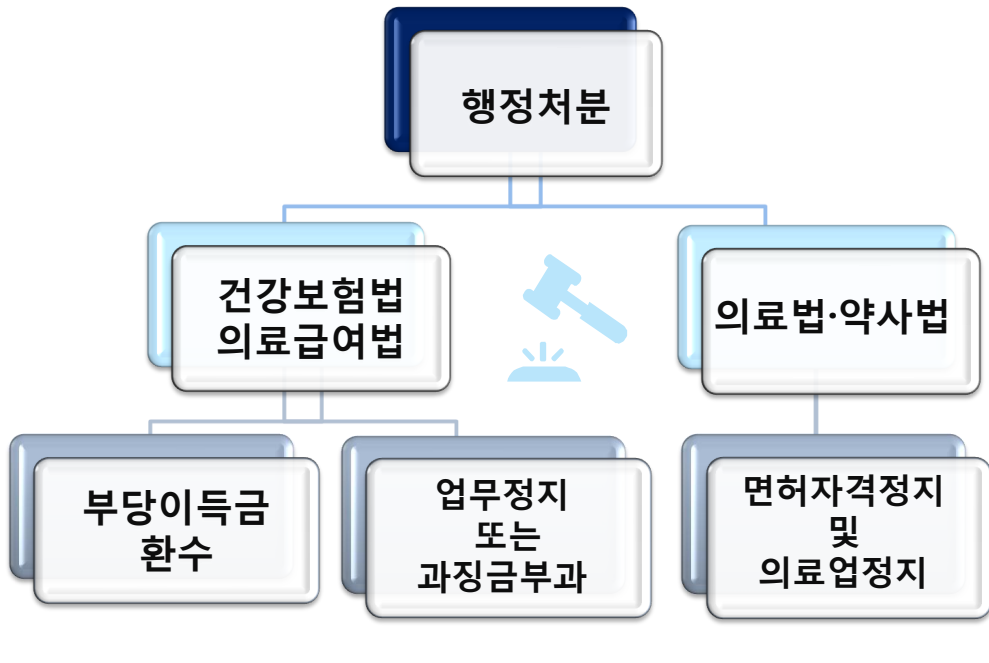


행정처분 종류



허위 청구 4중 처분

- 1) 의료법에 근거 행정처분(면허정지)
- 2)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환수,업무정지,과징금
- 3) 의료법, 형법에 의해 형사 처벌
- 4) 허위 청구로 인한 면허정지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(의료법 66조3항)
- 5) 하나의 행위에 대해 처벌은 사실상 4번 받음 - 헌법상의 평등권, 형평성, 비례의 원칙, 과잉금지의 원칙에 사실 상 위배

부당금액 정산 및 행정처분 산출

조사대상기간 6개월 (진료비1억) → 총 부당금액 300만원 → 부당비율 3% → 월평균부당금액 50만원 → 업무정지 일수는?

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

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관련

(단위 :일)

월평균 부당금액	부 당 비 율				
	0.5%이상 1%미만	1%이상 2%미만	2%이상 3%미만	3%이상 4%미만	4%이상 5%미만
15만원이상-25만원미만	-	-	10	20	30
25만원이상-40만원미만	-	10	20	30	40
40만원이상-80만원미만	10	20	30	40	50
80만원이상-320만원미만	20	30	40	50	60
·	·	·	·	·	·
·	·	·	·	·	·

과징금 부과

10일	11-30일	31-50일	51일 이상
·총부당금액 X 2	·총부당금액 X 3	·총부당금액 X 4	·총부당금액 X 5

업무정지 가중 처분

- 1) 5년 이내에 업무정지(과징금처분)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- 2) 당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 부과 (업무정지1년, 과징금 5배 초과 불가)
- 3) 5년 기산 방법 : 행정처분통보문서 송달일자로 부터 부당청구가 다시 확인 된 날(현지조사 확인서 징구일)

면허자격정지 개념

면허자격 정지

-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거짓청구 →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정지
- 의료법 제66조(자격 정지 등)제1항 제7호
- 약사법 제79조(약사·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)제2항

의료업 정지

-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 불가
- 의료법 제66조(자격정지 등)제3항 → 관련 서류를 위조,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 한 때(자격정지)

거짓청구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

의료법 및 약사법

(단위 : 월)

월 평균 거짓청구금액		거 직 청 구 비 율					
의료기관 약 국	보건의료원,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	0.5% 이 상 1% 미만	1% 이 상 2% 미만	2% 이 상 3% 미만	3% 이 상 4% 미만	4% 이 상 5% 미만	5% 이 상
12만원 미만	4만원 미만	-	-	1	2	3	4
12만원 이상 - 20만원 미만	4만원 이상 - 7만원 미만	-	1	2	3	4	5
20만원 이상 - 40만원 미만	7만원 이상 - 10만원 미만	1	2	3	4	5	6
40만원 이상 - 160만원 미만	10만원 이상 - 20만원 미만	2	3	4	5	6	7
160만원 이상 - 700만원 미만	20만원 이상 - 35만원 미만	3	4	5	6	7	8
700만원 이상 - 2,500만원 미만	35만원 이상 - 50만원 미만	4	5	6	7	8	9
2,500만원 이상	50만원 이상	5	6	7	8	9	10

※ 거짓청구비율(%)=총 거짓청구금액/진료(약제)급여비용총액×100

현지실사 후 처분선택 업무정지 VS 과징금 최대 5배 선택시 고려점

(1억 낼 것이냐? VS 5개월 실 것이냐?)

→ 최종판결 전 업무정지가 시행된다

개선방향 - 면허정지, 업무정지 같은 처벌은 최종심 판결 이후 시행해야

행정처분 절차

- 처분사전통지
  -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
  - 처분 내용 및 근거
  - 의견 제출 방법
- 의견청취
  - 우편 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의견제출
- 의견검토
  -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평원에서 검토하여 복지부에 보고
- 행정처분
  -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
- 관련근거: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, 제22조제3항

형사고발 기준

-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(건보법 제115조)
  -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
- 서류 미제출, 거짓보고, 거짓서류제출, 조사거부·방해·기피할 경우(건보법 제 116조)
  - 1천만원 이하 벌금
-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는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
  -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(형법 제347조)
- ※ 고발(내부기준) 거짓청구금액 750만원 또는 거짓청구비율 10% 이상인 기관

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(법 제 100조)

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은 위반행위,

처분내용, 명칭, 주소, 대표자의 성명 등을 공표

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: 위원장 1인 포함 9명, 임기 2년(연임 가능)

- <공표대상> - 거짓청구금액 1,500만원 이상 - 거짓청구비율 100분의 20이상인 경우
- <공표방법> - 보건복지부, 심평원, 공단, 시·군·구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 -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또는 방송에 추가 공표
- <공표절차> - 건강보험 공표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대상 선정 →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 → 소명자료 검토 후 최종 대상확정 → 인터넷·언론 등에 공표

현지실사문제점

- 실적, 처벌 목적이 아니라 운용 취지에 맞게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위해 운용해야
- 행정조사기본법 미준수 최소한의 조사원칙,조사권 남용금지 (4조1항) 공동조사원칙,중복조사금지(4조3항, 15조) 처벌보다 제도원칙(4조4항) 조사목적, 조사범위와 내용 명확화의 원칙(11조) 7일전 사전통지원칙(17조)